

Vol. 02

2024.02. 19.

Customs &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2017-2140

F. 02-545-1682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안만복본부장 mbahn@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박주경본부장 jpark@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장진명본부장 jmjang@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김민혁전임 mhkim@hjcustoms.co.kr

CONTENTS

- I. 법령 개정사항
- II. 조세심판사례
- III. 품목분류 변경고시
-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I. 법령 개정사항

1. 「관세법」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명의대여를 통한 관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부와 제척기간의 예외 사유를 신설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며, 우회덤핑을 통한 덤프방지조치의 무력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우회덤핑에 대한 덤프방지관세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을 신설하며,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의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하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제21조)	명의대여를 통한 관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게 함.
가산세의 감면 (제42조의2)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함. 가.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30 나.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이내 :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20 다.보정기간이 지난날부터 1년 초과 1년 6개월 :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10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프방지관세의 부과 (제56조의2)	우회덤핑을 통한 덤프방지조치의 무력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덤프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우회덤핑하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지정하여 덤프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제116조의6)	납세자는 관세청장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정보로서 과세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납세자 본인 등 업무를 처리하려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24.01.01.

I. 법령 개정사항

2.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자동 캔 제조기 등 3개 물품을 추가하고, 공장 자동화 물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관세 감면율을 각각 100분의 70,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 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여행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별도의 한도가 적용되는 향수의 면세한도를 60밀리리터에서 100밀리리터로 상향하고, 재수출면세대상물품에 반도체 제조 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및 해당 물품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를 추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공장 자동화 물품 감면 대상 물품 추가 (별표 2의4)	8460.40, 8460.90 : 호닝머신이나 래핑머신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베어링(Bearing) 제조용 슈퍼피니싱기 (Superfinishing)로서 외경이 130mm 이하, 폭이 50mm 이하인 가공물을 연마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주축의 분당 최대 회전수가 4,000회 이하이며, 지석 진동수가 분당 최대 1,250회 이하인 것으로 한정함.
	8463.90, 8479.89 : 기타 에어로졸 캔(Aerosol Can) 제조에 필요한 직경축소(Necking) 굽힘(Flanging) 및 이중 권체(Seaming)가 가능한 자동 캔 제조기로서 각 공정별 모듈(Module)이 결합되어 있고, 분당 270개 이상의 캔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
향수 면세한도 상향 (제48조제3항)	향수의 면세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상향
재수출면세 대상물품 추가 (제50조제1항)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가. 반도체 제조설비 운반용 카트 나. 반도체 제조설비의 운송과정에서 해당 설비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 기록하기 위해 해당설비에 부착하는 기기

(3) 시행일

‘24.01.01.

I. 법령 개정사항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관한 처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의 대상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농어업인까지로 확대하며,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협정관세 정용물품의 보정이자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제12조)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함.
중소기업의 원산지 증명 지원 (제13조제2항 신설)	농어업인에 대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농어업인까지로 원산지증명 지원을 확대함.
보정이자 (제35조의2 신설)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함. 1. 납세의무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관세법 제38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시행일

'24.01.01.

I. 법령 개정사항

4.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세관장으로부터 통지받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과소신고에 관한 오류를 다음 신고시에도 반복하는 경우 등을 수입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수정수입세금 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법 제35조제2항,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종전에는 세관장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 경정하거나 수입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결정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수정수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납세자가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 함
수정수입세금 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 (영 제71조의2 제3항)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발급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예외적으로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수입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를 세관장으로부터 통지받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과소신고에 관한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경우, 세관장이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수입자가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3) 시행일

'24.01.01. (23년 개정사항에 대하여 24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임)

I. 법령 개정사항

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①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식품으로 인해 위해를 방지하고 유통단계 행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회수 명령 등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② 해외제조업소 및 우수수입업소의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 근거 및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이 중단된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의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471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 법률 제19620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 및 법률 제19693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의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회수조치나 회수계획보고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압류·폐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종전의 등록갱신을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으로 변경하고,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을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 등으로서 자가 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등으로 정하며,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의 영업등록증의 훼손·분실, 위변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업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종전에는 영업등록 변경 및 신고 등에 영업등록증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영업등록증의 경우에는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 (제44조의3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등 원료·성분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할 수 있음 (제1항)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거나 인정된 원료·성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제2항)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제44조의5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규칙 제44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원료·성분 중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지정하거나 제44조의3제2항제3호 및제4호의 원료·성분 중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원료·성분의 명칭, 사유, 일자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 (제2항)
해외제조업소 및 우 수수입업소의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 근 거 마련	종전의 등록갱신을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으로 변경 함
수입신고가 필요하 지 않은 수입식품등 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을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으로 정함
영업등록증의 훼손· 분실, 위변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업등록증을 전자 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의 영업등록증의 훼손·분실, 위변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업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종전에는 영업등록 변경 및 신고 등에 영업등록증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영업등록증의 경우에는 제출의무를 면제함

(3) 시행 일자

'24.01.01

I. 법령 개정사항

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신고사항 중 중점관리물질의 노출정보, 함유량, 용도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신고 및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과 관련된 권리·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승계한 자로 하여금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등 (제33조)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는 중점관리물질의 노출정보, 함유량, 용도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권리·의무의 승계 (제45조의2 신설)	화학물질을 등록·신고를 한 자 또는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한 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화학물질 제조사·수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함.

(3) 시행 일자

'24.01.04.

I. 법령 개정사항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신고사항 중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 용도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신고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는 경우와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시 8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6 일부 신설)	마.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아. 법 제4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1) 1차 위반시 : 600만원 (2) 2차 위반시 : 800만원 (3) 3차 이상 위반시 : 1,000만원

(3) 시행 일자

'24.01.04.

I. 법령 개정사항

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신고사항 중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 용도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신고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변경신고와 지위승계 신고의 절차와 서식 및 신고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금액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수수료 (별표 11)	마.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정점관리물질의 신고 수수료가 50,000원에서 20,000원으로 변경 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 15,000원 사.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 2,000원

(3) 시행 일자

'24.01.04.

I. 법령 개정사항

9.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 신청 시 품질책임자의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가명정보 처리된 의무기록의 경우에는 임상시험 동의 절차를 완화하여 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제조업허가의 신청절차 (제3조)	품질책임자에 대한 다음의 서류 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재직증명서 등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상시험 실시기준 등 (제24조)	제1항제4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의무기록 등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임상시험의 경우로서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가명정보 처리를 한 경우에는 별표 3 제6호에 따른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상자의 동의 없이 임상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3) 시행 일자

'24.01.16.

II. 조세심판사례

1. 쟁점물품(Cover Glass)을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 8529.90-2000 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안전 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 7007.19-1000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1) 주요내용

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가공 정도는 관세율표 제 7007 호의 강화안전유리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가공이 아니고, 완성품 작동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므로 부분품 세번인 제 8529 호로 분류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나. 쟁점물품은 열강화 공정 이외에 면취 가공, 000 의 홀 펀칭, BM 인쇄, AR, AS 코팅, 마일러 필름(Mylar Film), QR 코드 레이저 인쇄 등의 가공을 한 물품으로 제 7007 호의 강화안전유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가공으로 보이는 점, AR, AS 코팅, BM 인쇄, 마일러 필름(Mylar Film), QR 코드 각인 등 추가가공 비용이 쟁점물품 원가의 000 를 차지하고 있는 점, 이런 추가가공이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져서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일반적인 강화안전 유리에 필요한 가공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이 결합되지 않을 경우 쟁점완제품의 평판디스플레이 패널 표면이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편광기능을 상실하는 등 정상적인 디스플레이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강화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함.

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통칙 제 1 호 및 제 6 호 규정에 의하여 HSK 제 8529.90-2000 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강화안전유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2) 결정요지

쟁점물품에 이루어진 가공은 안전강화유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고, 가공과 관련한 원가 비율, 기능 등과 함께 쟁점물품이 결합되지 않으면 완제품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HSK 제 8529.90-2000 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3) 결정일

2023.11.06 (조심 2023 관 0024)

Ⅲ. 품목분류 변경고시

1. Adaptive Pressure Control valve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고시

구분	내용
품명	Adaptive Pressure Control valve
물품 설명	LCD · 반도체 공정에서 진공챔버 내부의 압력을 일정하게 자동 조절하기 위한 물품으로 밸브와 자동조절기가 일체로 결합되어 있음
HS CODE	-변경 전 : 제8481.80-1010호 -변경 후 : 제9032.20-0000호
변경 사유	지시된 압력값과 조정해야 할 압력값을 비교하여 밀폐된 챔버 내부의 압력을 일정한 희망치로 자동 유지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제9032.20-0000호로 분류(제2023년 제7회 관세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4.01.15

Ⅲ. 품목분류 변경고시

2. Onion juice 등 3 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1.진한 호박100(Pumpkin juice 100);R.KOREA - 품목분류2과-5784 (2015.07.24) 2.Onion juice ; GOLDEN TAMANEGLI; R.KOREA - 품목분류2과-1218 (2010.06.28) 3.혼합 채소 주스 농축물 (Shade strawberry red-cloudy-A) - 품목분류과-101430 (2004.09.07)
물품 설명	음용하거나 식품 등에 첨가하기 위해 양파나 호박 등의 채소를 중탕 또는 열수 등의 방법으로 추출하여 농축한 것
HS CODE	-변경 전 : ① 제2009.89-2000호 ② 제2009.80-2000호 ③ 제2009.90-2000호 -변경 후 : 제1302.19-9099호
변경 사유	액상차 등의 일종으로 식물성 재료를 중탕이나 열수 등의 방법으로 추출하여 만든 제품이므로 제1302.19-9099호의 식물성 추출물로 분류(제2023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4.01.15

Ⅲ. 품목분류 변경고시

3. NASURE 51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Supplementary feed; NASURE 51 - 품목분류2과-7671 (2018.12.05)
물품 설명	대두유에 비타민E, 로즈마리 추출물, 레시틴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산화방지용 첨가제로 식품이나 사료 제조시
HS CODE	-변경 전 : 제2309.90-2099호 -변경 후 : 제2106.90-9099호
변경 사유	식용과 사료용 둘 다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므로 조제 식료 품의 범주로 보아 제2106.90-9099호에 분류(제2023년 제 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4.01.15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첨단기술 및 전략물자 불법 유출 등 경제안보 침해행위 국경에서 차단

-관세청, 기술침해 물품 국경통제 확대 및 한·미·일 국제공조 통해 총력 대응

관세청은 '24년 국경단계에서 첨단기술 및 전략물자 불법 유출 차단을 강화해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행위에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관세청은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핵심기술이 내재된 제조장비, 핵심부품 등의 수출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24년에는 그간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침해 물품 및 전략물자에 대한 국경통제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외 기관들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첨단기술 해외유출과 전략물자 수출통제 회피 행위는 우리의 경제안보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만큼, 기술침해 사실을 확인할 경우 관세청 「기술유출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첨단기술 해외유출 적발 사례('23.5.31. 언론보도) >

(주)포스코가 특허 등록하고 국가 첨단기술로 지정된 강판 도금량 제어장비기술을 도용해 제작한 에어나이프 7대(58억원 규모)를 해외로 수출 또는 수출하려한 일당 5명 적발

수출 예정인 에어나이프 3대를 압수하여 해외 철강사의 부당이익 최대 6,600억원 차단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2. 관세청·식약처, 생물학적 제제 등 보관·수송 가이드라인 개정

- 보관·수송 관리 합리화, 운영방안 등 상세하게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수송 관리 합리화에 따른 운영방안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생물학적 제제 등 보관 및 수송 관리 가이드라인'을 12월 28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 * 생물학적 제제 등 : 생물학적 제제(백신, 혈장분획제제 및 항독소),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세포배양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및 이와 유사한 제제

주요 개정 내용은 ▲보관온도에 따른 제품군*별 수송 관리 방법 안내 ▲일시적 온도 이탈 시 과학적 입증 방법 안내 ▲제품 수송 시 온도관리 등에 관한 질의응답 사항 등이다.

- * ❶백신, 냉장·냉동 보관 제품, ❷냉장 보관 제품 중 '사용 시 일정기간 비(非)냉장 보관' 가능 제품, ❸비(非)냉장(예: 실온) 보관 제품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생물학적 제제 등을 취급하는 제조·수입 업체와 도매상이 개정된 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실무 운영 측면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했으며, 바이오의약품의 유통 체계를 고려한 온도관리 방법 등도 상세하게 안내하였다.

- *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 관리규칙」(총리령),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등

식약처는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이 올바른 바이오의약품 수송과 보관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바이오의약품을 공급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3. 관세청, '24년 1월 1일부터 물품검사 수수료 폐지

-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 경감, 무역 경쟁력 향상 및 수출 활력 제고 기대

관세청은 「관세법」 개정*을 통해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검사수수료를 '24년 1월 1일부터 폐지했다고 밝혔다.

* 「관세법」 제247조 기존③ 제1항에 따른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신고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개정③ <삭제>

그동안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기업이 소유한 보세창고 등에 직접 찾아가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은 소요시간당 2,000원의 기본수수료와 실비상당액을 검사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한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무역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검사수수료 폐지는 '24년 1월 1일 검사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가 번영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4. 관세청, 수출기업 통관애로 해소 위해 관세외교 역량 집중

- '24년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글로벌 협력채널 구축과 제도적 기반 강화, 해외통관정보 제공 확대 등을 통해 수출지원에 총력을 다할 예정

관세청은 '24년 수출 활력을 제고하고 수출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외교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겪는 통관애로의 예방 및 신속한 해소를 위해 다양한 관세협력 채널을 포함한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최근 세계적 공급망 재편, 경제블록화 심화 등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각국에서 직면하는 비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 통관애로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에 접수된 해외 통관애로는 151건으로, 유형별로는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관련된 애로가 113건(75%)으로 가장 많았고, 통관절차 등과 관련된 애로가 27건(18%), 품목분류 분쟁이 9건(6%), 기타 2건(1%)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품목분류 분쟁 등 규모가 크고 복잡한 통관애로가 발생할 경우 개별 기업이 외국세관 등을 상대로 체계적·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청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세청은 '24년 우리 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예방 및 해소를 위해 ①해외 통관 애로 빈번 발생국 관세당국, 국제기구 등과 다양한 관세협력 채널 구축·활용 확대, ②무역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③통관애로 사전 예방을 위한 해외 통관정보 제공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① [관세협력 채널 구축·활용 확대] 관세청은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 등 고위급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통관애로 빈번 발생국 관세당국과 쟁점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통관분쟁 발생을 사전 예방 또는 신속 해소할 수 있는 협력 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해외 현지에서 밀착 지원하고,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와도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들의 국제 품목분류 분쟁 대응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② [제도적 기반 강화]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기업이 해외에서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 통관애로 최다 발생 유형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관련 애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구축을 지속 확대하고, ▲주요 교역국과 세관상호지원협정,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등 우호적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관세당국 간 협정 체결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③ [해외 통관정보 제공 확대] 관세청은 우리기업의 해외 통관애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외국의 통관제도 변화 동향, 통관 유의사항 등 개별기업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해외 통관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관세관 파견국*에 대해서는 관세관을 초청해 주재국 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8월), ▲관세관 미파견국에 대해서는 현지 세관직원을 초청해 세미나(웨비나)를 가지고, ▲해외통관지원센터 누리집을 개편해 국가별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5개 본부세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두고 있으며, 관세평가분류원내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품목분류 국제분쟁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수출입기업은 해외 통관애로 발생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연락하거나, 해외통관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해당 애로 사안을 접수하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국가와 실용적 관세협력 활동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5.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과테말라 가입

- 1일 9일(현지시간 1월 8일) 한국과 과테말라 등 중미 6개국이 협정문에 정식 서명
- 한-과테말라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우리 실질 국내총생산(GDP) 0.02% 증가, 소비자 후생 1.87억 달러 증가 기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월 9일(현지시간 1월 8일) 과테말라 현지에서 '과테말라의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의정서'에 정식으로 서명 하였다고 밝혔다. 알레한드로 잠마테이(Alejandro Giammattei) 과테말라 대통령 임석 하에 우리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이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하였고, 중미 측은 마리오 부카로(Mario Bucaro) 과테 말라 외교 장관 등 중미 6개국이 서명하였다.

* 금번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으로 기존 중미 국가와의 FTA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기존 중미 5개국도 한-중미 FTA의 당사국으로서 가입의정서 공동서명 및 비준 필요

서명식에 앞서 한-중미 FTA 당사국인 한국과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은 한-중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을 승인하는 결정문을 채택하였다.

과테말라는 한-중미 FTA 협상당시('15~'16년) 참여국이었으나, 상품양허 등 이견으로 협상에서 이탈하였고, 이후 '21.9월부터 추가 가입 협상을 통해 약 2년만인 작년 9월 협상 타결을 선언한 바 있다.

* 한-중미 FTA 발효연도 : ('19.10) 니카라과, 온두라스, ('19.11) 코스타리카, ('20.1) 엘살바 도르, ('21.3) 파나마, ('24년중 비준 및 발효 추진) 과테말라

이번 정식 서명은 협상 타결 이후 한국, 과테말라 및 다른 중미 5개국이 각국의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국회 비준동의 요청 등 국가별 비준절차를 거쳐 최종 발효될 예정이다.

중미 6개국 중 최대 경제국인 과테말라가 한-중미 FTA에 가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한-중미 FTA가 최종 완성되게 된다. 과테말라는 우리 교민 약 6천 명, 150여 개 기업(섬유·의류 등)이 현지 진출 및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양국 간 무역·투자·인적교류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과테말라 FTA 발효 후 5년 이내에 우리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0.02% 증가하고, 국내 소비자의 후생이 약 1.87억 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과테말라로부터 커피, 바나나, 니켈, 구리, 알루미늄, 의류 등 주로 농산물과 광물을 수입하고, 자동차, 면사·편직물 등 의류 원단, 석유 화학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양국이 대부분의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 적으로 철폐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양국 간 교역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과테말라는 6,677개(전체 95.7%)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하며, 편직물(현 기준관세 0~10%), 타이어(5~15%), 공기여과기·제동장치·서스펜션 등의 자동차부품(10%) 등 3,927개(전체 56.3%) 품목은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타이어튜브(5%), 섬유사(5%), 음향기기(15%) 등 770개 품목은 5년 이내 관세를 철폐한다.

* 면사(5%), 편직물(0~10%) 관세철폐에 따라 원단 수출 후 의류를 수입하는 양 국간 섬유·의류 공급망 강화 기대

우리는 11,673개 품목(전체 95.3%)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며, 사탕수수당(현 기준관세 3%), 커피(볶은 것 8%, 볶지 않은 것 2%), 당밀 (3%), 편직물(10%) 등 9,791개(전체 80%) 품목은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 하고, 바나나(30%) 등 일부 과실류의 관세는 5년 이내 철폐한다.

아울러, 한-중미 FTA에 과테말라가 가입함으로써 양국 간 2002년에 체결된 투자보호협정이 종료되고, 한-중미 FTA의 투자자 보호규범이 적용 되며, 설립 전 투자 보호 및 기존 투자 확장에 대한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부여 등 보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 규범이 적용되어 우리 기업의 안정적 현지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과테말라는 인구·경제규모 측면에서 중미지역의 허브 국가 일 뿐 아니라 미국, 멕시코, 유럽연합(EU) 등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 북미·유럽연합(EU)지역 진출에도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 하고, “올 한해 영국, 인도 등 주요국과 FTA 협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핵심 광물·자원 등 전략적인 가치가 큰 아프리카·아시아 등 신흥국과도 공급망 강화를 위한 유연한 형태의 통상협정인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촘촘하게 추진하여 우리 기업이 뚫 수 있는 운동장을 전 세계로 계속 넓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6. 수입식품 통관검사 강화와 함께 신속한 통관 지원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기획·현장 검사 대상 확대 등 '2024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 수립·운영
- 축산물 정밀검사 기간 단축,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 제도개선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통관)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을 수립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검사체계 운영과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식약위 규제혁신 2.0' 총 80개 과제 중 '신속하게 검사한 수입 축산물, 더 신선하게 만날 수 있어요(30번)', 'K-푸드 더 신속하게 수출할 수 있어요(60번)'

2024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 수립·운영

식약처는 매년 제품별 수입 동향, 시험·검사 결과, 국내·외 위해정보, 정책 여건 변화 등을 분석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 검사항목 등을 선정하고 이를 검사에 반영하는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을 수립·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보다 많은 서류검사 건에 대해 '전자심사24*(SAFE-i24)'를 적용('24년 자동 신고수리 비율 : 약 20%까지)해 검사를 실시하고, 고위험 품목 등을 자동 선별하는 인공지능(AI) 분석 시스템('23.11월 적용)을 무작위표본 검사**에 적용해 효율적인 통관검사를 추진한다.

* 전자심사24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시스템으로, 적용 시기·대상은 식품첨가물('23.9.14), 농·축·수산물('23.12.18), 가공 식품·건강기능식품('24.6월), 기구·용기·포장('24년 말)

**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서류·현장검사 포함)

또한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사체계를 유지*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 등에 대한 기획검사와 소비자를 기만할 개연성이 있는 제품에 대한 현장 검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및 15개현 27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 그 외 모든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시마다 세슘 등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

2024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기획검사 대상 확대 계절별 다소비 식재료(참돔·민어류 등), 장난감이 포함되어 어린이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과자류, 커피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커피용품·다기류 등으로 기획검사의 대상을 확대한다.

* 커피 수입량(단위:만톤) : ('19) 17.6→('23) 19.1 (평균 수입량 19.2만톤/ 연평균 1.67% 증가)

② 축·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검사항목 확대

올해부터 다소비 축·수산물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PLS*)가 우선 시행됨에 따라, 소·돼지·닭고기, 달걀, 어류에 대해 동시분석이 가능한 동물용의약품의 항목을 약 70종에서 약 150종까지 확대하여 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PLS(Positive List System) :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 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

또한 수산물에 부적합 우려가 높은 동물용의약품 등을 ‘중점 검사항목*’으로 적용해 위해항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중점검사항목 : 부적합 이력 및 위해 우려가 높아 검사가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정하는 필수 검사항목

③ 현장검사 강화

부패·변질 등 사유로 선별보완 조치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농·임산물의 현장검사 대상을 확대(21종→24종) *하고, 관세차익등을 목적으로 가공식품이나 농산물로 허위 신고할 우려가 있는 품목** , 여러 제품을 한 번에 수입신고하여 정밀검사를 회피하고자 하는 식품용 기구류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확대한다.

* 관능검사 대상 농·임산물(24품목) : 고추, 커피원두, 고수, 황기, 참깨 등 24품목

** 허위신고 우려품목(5품목) : 참깨, 서리태, 땅콩, 쌀, 녹두

또한 과도한 얼음막을 이용한 불법 증량*(과도한 글레이징, 물주입 등), 어종별 가격차이를 이용한 품명 허위 신고**(저가→고가 어종) 관능검사를 회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저품질 제품) *** 등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현장검사도 확대한다.

* 불법증량(낙지, 새우 등), ** 허위신고(돔류, 민어류 등), *** 저품질우려(다랑어류)

참고로 식약처는 작년에 명절 등 특정시기 수입품목이나 부적합·위해 정보 분석 품목 등 4,700여건의 기획검사*를 실시해 13개 국가, 37개 제품(부적합, 0.78%), 249톤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했다. * 취약계층(영유아) 사용 기구류, 농약 다빈도 부적합 농산물, 농산물 단순가공품 검사 등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개선 추진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을 확보하면서 통관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❶ 축산물 정밀검사 기간 단축

그간 축산물의 경우 식품 등 다른 품목보다 통관검사 시 받아야 하는 정밀 검사 기간(식품 10일, 축산물 18일)이 길었으나, 타 품목과 형평성, 검사 인력·장비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검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입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시간 절감 등 영업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축산물 수입신고 처리기간 (기존)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 18일 → (개정) 14일

❷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

식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 자사 제조용 용도의 정제·가공용 원료, 식용향료에 한해 적용하던 계획수입 신속 통관 제도 *의 적용 대상을 ▲수출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료 ▲ 제조용 원료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과 식약처 공인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받은 후 수입하는 제품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으로 승인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 i)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되고 ii) 부적합 이력이 없는 iii) 우수수입업소 등록 식품 iv) 제조용 원료 중 정제가공용 원료 및 향료를 대상으로 수입신고 즉시 신속하게 통관시키는 제도로, 2020년부터 도입·시행

** 최근 5년간 연속적으로 수입된 국가의 수입식품등 중 연간 5회 이상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이력이 없고,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으며, 위해정보가 없는 수입식품 등

※ '축산물 정밀검사 기간 단축,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 규정 입법예고 중 ('23.12.21~'24.1.31)

참고로 식약처는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수산물 등 각 품목별로 운영 중이던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수입식품 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제정('23.12.)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이로써 수입 통관검사 시에 일관된 기준을 제공할 수 있어 검사의 효율성과 영업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우려가 있는 품목이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검사 항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관검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7. 중소 수출입기업 성장을 위해 올해도 관세청 세정지원 적극 추진

관세청은 올해 중소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을 제고하고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세정지원 프로그램은 ①관세조사 유예, ②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③담보제공 생략, ④수출환급금 신속 지급, ⑤부가세 납부유예가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관세청은 다양한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3만여개 기업에 대해 약 7천억원을 지원했다.

'23.12월 관세청이 세정지원 프로그램 이용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한 결과 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만족도 93%), 다시 이용하겠다(만족도 93%)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제도 평가(만족도,%) : ①기업에 직접적 도움(93)>②재이용 의사 있음(93)>③제도 안내 적절(85)>④이용 불편 없음(82)

구체적인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자금 유동성 확보(만족도 92%), 안정적 경영 지원(만족도 89%), 사업 정상화(만족도 88%) 순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도입 효과(만족도,%) : ①자금 유동성 확보(92)②안정적 경영지원(89)>③사업 정상화(88)>④수출 경쟁력 강화(86)

관세청은 세정지원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세정지원 대상 기업 및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기존 세정지원 대상 기업 외에도 재활용 원료를 활용한 제품을 제조해 에너지·자원절약에 기여한 우수 친환경 기업(GR인증)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산업부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하여 지원 대상 기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해 즉시 납부가 어려워 분할납부 계획을 제출한 선량한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매각 유예 등의 회생지원도 추가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은 고물가·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우리 수출입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지속 펼쳐 나갈 계획이다.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8. 대외무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
- 무역안보 환경변화에 따른 전략물자 지정 근거 확대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1.25.(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금번 개정안은 무역안보 환경변화와 국제적인 수출통제 강화 추세를 고려하여 ▲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하고, ▲ 전략물자*의 지정 근거를 확대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전략물자 :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품목·기술로, 수출시 정부 허가 要

첫째,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 무역안보 정책수립 등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수립과 산업계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현행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라 지정하던 전략물자를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지정 근거를 확대하였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 : 1. WA(바세나르체제), 2. NSG(핵공급국그룹), 3. MTCR(미사일기술 통제체제), 4. AG(호주그룹), 5. CWC(화학무기협약), 6. BWC(생물무기협약), 7. ATT(무기거래조약)

셋째,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 무허가수출의 적발을 위해 전략물자 판정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부허가 및 이동중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근거 등을 신설하였다.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는 법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시행령을 마련하는 한편, 무역안보관리원으로서의 개편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